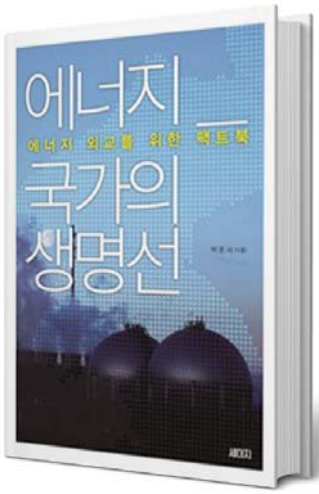


에너지-국가의 생명선
박준서 지음 | 세이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이래 국제정치학은 '권력'을 중심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경제학이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가격'에 비해 권력은 정의하기도 계량하기도 힘들다. "권력은 무엇인가" 는 계속되는 논쟁거리다.

파워 대신 에너지로 조망한 국제정치학

이 책은 권력(power) 대신 에너지(energy)를 중심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중심으로 근대 세계와 자본주의의 형성,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치를 분석한 책이다. 국가는 에너지의 수급이라는 국익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국력을 측정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조망한 에너지 세계사, 에너지 국제정치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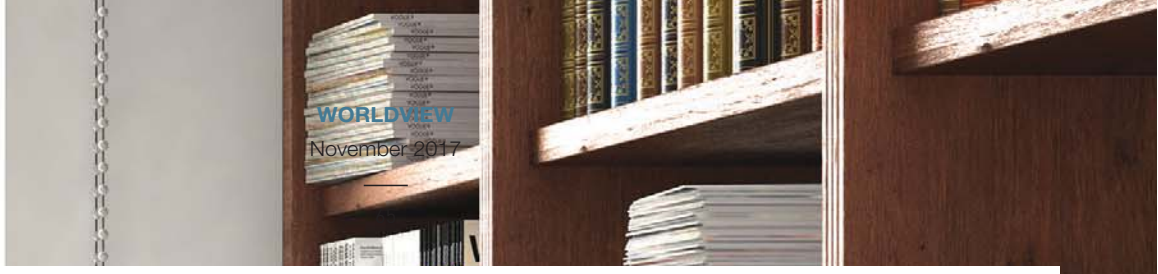
추천의 말에서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에너지 역사의 흐름과 각국의 에너지 현황이 하나의 좌표로 잘 정리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와 같고, 특히 대한민국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주요 정책현안인 통일을 심도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준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혁명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인류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사건이었다. 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라 생산성 자체가 높아져서 자본이 투자되면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생산과 이윤을 확대시키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확립한 것이다. 또한 교통과 통신수단을 혁신시켜 세계 전체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처음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에너지 안보는 부국강병의 첩경

이런 상태에서 국가의 기본기능은 에너지 공급 확보가 되고 나아가 이를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부국강병의 첩경이다.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이던 19세기에 독일은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공업화되고 독일 국력의 급속한 증강은 결국 영국의 패권과 충돌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탄광개발부터 시작되었고 조선과 만주 침략 시에도 가장 중시한 것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수탈구조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태평양 전쟁도 사실 일본의 유전 장악과 석유수송로 확보 때문에 발발한 것이고 결국 미국이 해상석유수송로를 차단하자 일본은 패망하고 만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실질소비량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국의 2%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 후 북한의 경제 재건은 우선 대규모 발전 인프라 건설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화력발전도 가능하나 한국은 화석에너지가 거의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발전이 가능하고 자연환경, 국토의 조건과 관계없고 연



료의 대외 의존도도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 외에는 현재로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책은 말한다.

한 국가의 흥망은 에너지공급 능력에 좌우된다. 따라서 대외정책결정시에 언제나 에너지 수급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미동맹 역시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에너지공급 확보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없으면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되고 종국에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국가가 직접 투자하거나 국영기업을 내세워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 및 자원의 해외투자는 민간 기업에게 맡기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책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중요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제네바 합의부터 2005년 9.19 합의까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은 2,000MWe 전력의 공급이었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은 동북아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유공급 전면 중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은 무역량의 80%, 석유 수입량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는 에너지 외교가 필수인 것이다.

무엇보다 낭만적인 탈원전 논의가 시작되는 이 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책이다.

책 속의 한 줄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혁명이다. p.15

김미영 / 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